

2026년 연구보고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2026. 9.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보고서 2026-05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권신정 · 이석민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Data and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국가데이터·통계는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활용 환경의 변화는 국가데이터·통계의 생산과 관리, 활용 방식에도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데이터·통계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26년 연구보고서에는 국가데이터·통계의 체계적 관리와 인공지능(AI) 기반 통계 생산 혁신, 그리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주요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첫째, 국가데이터·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국가데이터·통계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정보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인 GSI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또한, 사망 원인통계의 원사인 분류와 기업통계등록부 정비과정의 산업분류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여, 전문적인 판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통계분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이동과 삶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이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소득 변화와 이동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청년정책과 지역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국의 삶의 질 지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지표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지표 구성과 활용방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표체계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발전을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들은 국가데이터·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새로운 기술과 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한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데이터·통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구성	2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
제2장 국내외 사례분석	4
제1절 국내 선행연구	4
제2절 지역 이동에 따른 소득이동 해외 사례	7
제3절 시사점	8
제3장 청년층 인구이동과 소득변화	9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청년이동	9
제2절 권역 간 이동과 소득변화	13
제3절 권역 내 이동과 소득변화	20
제4절 요약 및 소결	24
제4장 장기 소득 이동성 및 청년층 연령분화	27
제1절 장기 소득 이동성 분석	27
제2절 청년층 연령분화 분석	33
제5장 결론	39
참고문헌	41
Abstract	42

요 약

본 연구는 행정자료 기반의 대규모 종단자료인 소득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지역이동과 소득 변화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동 전후의 소득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청년층 지역이동이 소득 형성과 소득 이동성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이동이 지역 경쟁력 약화와 맞물려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분석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39세 청년층으로 한정하였으며, 지역 구분은 5극3특 광역경제권 체계를 적용하였다. 소득 변화는 평균소득 증감률과 소득분위 이동비율을 중심으로 절대적·상대적 소득 이동성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수도권 과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비교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동 여부 및 방향, 권역별 특성에 따라 소득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도 상이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분석 기간을 2017~2023년으로 확장하여 장기 소득 이동성을 함께 검토하고, 수도권 전입 시기별로 이주 청년의 소득 변화를 추적하였다. 또한 청년층을 20대와 30대로 구분한 연령 분화 분석을 통해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을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년층의 지역이동이 소득 이동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별·권역·세부 연령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종단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소득이동통계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향후 여러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분석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소득 이동성, 종단 센서스, 행정자료, 지역균형발전, 5극3특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을 넘어 노동시장 진입, 소득 형성, 생애주기 전환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두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전개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지역 간 생산성 격차와 인적자본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이는 국가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이동은 학업이나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 사건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이동이 소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간 인적자원의 재배분과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지역 간 인구 이동의 규모나 방향, 또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동 이후의 경제적 성과, 즉 지역이동이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성장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지역이동이 긍정적 기회와 부정적 제약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더 나은 일자리의 접근성 향상과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적 측면으로는 주거비 상승 및 불안정한 정착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통계플러스(2024년 가을호)에서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경제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장시간 근로·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채·좁은 1인당 주거면적·긴 통근시간 등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이중적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지역이동이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년층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이동 전후의 소득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지역이동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한다. 나아가 셋째, 이동의 방향(예: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수도권)에 따른 소득 효과의 비대칭성을 검증함으로써, 청년층 이동이 개인 소득의 향상 혹은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국가데이터처의 승인통계인 「소득이동통계」를 활용하여 2022~2023년 기간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지역이동과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의 주요 요인이 일자리임을 감안하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39세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구분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권(5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동 유형은 '권역 간 이동'과 '권역 내 시도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이동통계는 국가데이터처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한 행정자료 기반의 대규모 종단 표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응답이나 표본 손실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연도 간 비교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자료적 특성은 청년층 개인 단위의 소득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추적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제3절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가 주로 지역 차원의 현상 분석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개인 단위의 소득 변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이동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보도자료 수준의 결과를 학술적 분석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통계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층 소득 이동성의 성별 격차를 함께 분석하여, 청년층 지역이동이 소득 불평등의 심화 또는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소득 이동성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층의 지역 정착 지원 정책과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선행연구

1. 종단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연구

국내 지역 이동성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교육 수준, 연령, 성별 등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이동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동 전 소득 역시 이동 결정의 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이동 자체가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동 전후의 소득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종단데이터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지역 이동자의 규모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조사 무응답이 적은 대규모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표 2-1>과 같이 여러 기관이 종단데이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가 있다. 1998년부터 약 5,000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되는 이 패널데이터는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가구 경제 분석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상호(2010)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고학력자의 지역 이동이 실질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은우(2012)는 동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구이동이 지역 간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동자가 비이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개인 능력보다는 지역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역 이동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다른 종단자료인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활용한 김경년(2010)의 연구에서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광역시도 간 이동 여부가 첫 일자리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을 이동한 졸업생이 비이동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첫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분석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매우 높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분화된 구조를 고려한 분석은 국내 인구 이동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강은택 외(2012)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도권 이동 여부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이동자와 비이동자 간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광성(2018) 역시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초점을 맞춰 대졸자의 임금 변화를 대졸자직장이동 경로조사 패널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대졸자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임금이 상승했고, 비수도권의 고학력자 유출은 지역 격차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표 2-1 > 국내 주요 종단데이터 비교

조사명	주관 기관	조사대상 및 규모	패널현황	주요 활용 분야
한국노동패널 조사 (KLIPS)	한국노동연구원 (KLI)	도시지역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5,000가구)	1998년~현재	노동시장구조, 고용·임금 이동, 가구 경제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KLoSA)	한국고용정보원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10,000명)	'06년~현재 (※격년 조사)	고령화, 은퇴, 건강
한국복지패널 (KOWEP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국 가구 및 가구원 (7,000가구)	'06년~현재	소득 이동, 빈곤, 불평등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KEEP)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중·고등학생 (6,000명)	I기: '04~'15년 II기: '16년~현재 (I과 II는 단절)	교육-노동시장 이행
한국의료패널 조사 (KH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가구 및 개인 (8,000가구)	I기: '08~'18년 II기: '19년~현재 (I과 II는 단절)	건강 불평등, 보건 경제

2.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분석 연구

종단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앞서, 횡단면 데이터를 통해 국내 인구이동의 전반적 현황과 지역별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이동 규모와 흐름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이다. 해당 통계는 읍면동 단위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월별 이동자수, 이동률, 순이동 등을 산출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에서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기획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으며, 청년 수도권

이동의 주된 이유는 직업과 교육임을 알 수 있다.¹⁾ 덧붙여 수도권을 제외한 3개 비수도권 권역(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은 모두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구조적 원인과 이동 결과를 분석하고,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목할 점은 인구이동의 대부분이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인구집중의 대부분은 청년층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을 청년층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요 이동 요인은 지역경제(임금수준, 고용률, 성장률) 뿐만 아니라 문화, 의료 등 생활 인프라 요인이며, 반면 전세 가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이동 시 전공 및 교육수준과 일자리간 일치정도가 높아져 개인의 일자리 질과 매칭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동이 전체 출산율 저하, 고용지표의 지역 간 격차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은 기회 불균형과 연결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미 조성된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한편,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심층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거점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통해 주변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2024)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해당 지역 청년들의 유출과 지역 경쟁력 약화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도시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특화 정책을 상세히 제시하며,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결성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제2절 지역 이동에 따른 소득이동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1960년대부터 경제학, 인구사회학, 교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이동과 소득 간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인종과 이주 배경이 다양한 나라일수록 관심이 많은 연구 주제로, 센서스 자료 및 다양한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다만,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지역이동이 임금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해외 선행연구들은 지역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즉 이

1) 2024년 국내이동인구통계 내 청년층의 주된 이동 사유는 ‘직업’으로 20대(37.7%), 30대(32.8%)로 나타남

주와 임금 간 정의 상관관계를 밝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최광성, 2018).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노동시장 구조, 분석 시점, 자료 유형(횡단/종단), 특정 분석 대상 등 연구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캐나다 통계청(2008)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종단 행정데이터(Longitudinal Administrative Databank, LAD)를 활용하여 지역 간 소득 이동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들 수 있다. LAD는 국세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소득, 세금, 인구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SIN) 매칭을 통해 복지수혜자료, 건강데이터, 이민자 데이터베이스 등의 행정자료와 연계한 다차원적 종단 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국가통계연구원, 2025).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993~2004년 기간 동안 20~54세 인구의 주(州) 간 이동률은 1.1%를 초과하지 않아 전체적인 이동률이 높진 않았지만, 주별로 이동률과 소득 변화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동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연령, 가족 형태, 자녀 유무 등 개인적 특성과 함께 근로소득 수준, 사회보조금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주별 실업률 등 노동시장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대학 진학 및 졸업, 이직, 결혼 등 이동 관련 생애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서 이동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요인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보조금이나 실업보험 수급자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주에 거주할수록 이동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제·고용 여건이 지역 간 이동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동의 소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동 전후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이주자는 비이주자에 비해 더 큰 폭의 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소득 상승 효과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소득 개선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 이동과 소득 이동 간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시사점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방향과 자료 활용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이동에 따른 소득 이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종단자료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생산·관리하는 소득이동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소득이동통계 자료

는 전 국민의 약 20%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본으로, 국세청의 소득명세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인한 자료 손실 가능성이 낮다. 또한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는 승인통계로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종단데이터보다 안정성이 높다. 반면, 국내 패널자료의 일부는 코호트 단절로 인해 직전 패널과의 시계열 비교가 불가하거나²⁾, 예산 제약 및 패널 유지비용 부담으로 데이터 연속성 및 신뢰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나아가, 캐나다 LAD 사례처럼 향후 소득이동통계에 종사상 지위·교육·산업 정보 등 추가로 행정자료를 연계할 경우, 지역 이동 요인과 이동 결과로서의 소득 변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석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분석 대상을 청년층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인구 이동의 대부분은 청년층의 인구이동으로 설명된다. 덧붙여 청년이 떠나 출산이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산업성장과 일자리 다양성이 크게 악화되고 지역 경제 부진은 다시 추가적인 인구유출 요인으로 작용한다(한국은행, 2023). 따라서 청년층의 지역 이동에 집중하는 것은 인구이동이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지역 불균형의 원인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셋째, 수도권-비수도권 분석과 권역별 다층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이분화된 구조를 적용했으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권역별 특성과 지역별 문제점을 포착하기 어렵다. 수도권 과밀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분석을 진행하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분석도 필요하다. 최근 연구들에서 현실적인 지방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되는 거점(광역)도시 중심 ‘메가시티’ 전략이나, 5극3특 권역 구상 등은 이러한 방향과 유사하다. 이러한 다층적 분석은 지역 이동에 따른 소득 이동의 구조를 정밀하게 보여주며,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의 정책적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의료패널조사’ 패널은 1기와 2기가 단절되어 있음(<표 2-1> 참고)

제 3 장

청년층 인구이동과 소득변화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청년 이동

1.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성

2022년과 2023년 모두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 중 5극3특 권역을 이동한 사람은 약 50만 명으로, 전체 대상 인구의 1.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약 19만 명은 2023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청년층(15~39세)의 경우 약 32만 명이 권역 간 이동을 경험했으며, 이는 청년층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이 중 약 13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말해 전체 권역 간 이동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로, 국내 인구이동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이 있는 인구 중 69.6%가 청년층으로 나타나, 수도권 유입에서 청년층 이동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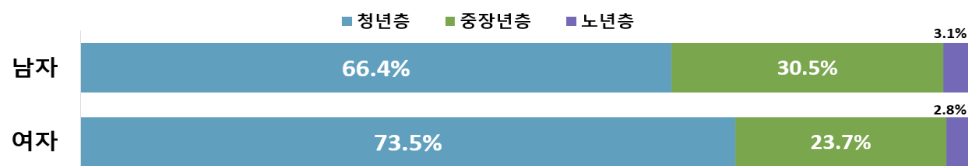
<표 3-1> 권역 간 이동자 수 및 이동률, 2022→2023년

(단위: 만 명, %)

구분	연령층	이동자 수		이동률	
		권역 간 이동	수도권 이동	권역 간 이동	수도권 이동
남녀 전체	전체(15세 이상)	49.7	18.8	1.8	0.7
	- 15-39세	31.8	13.1	3.0	1.2
	- 40-64세	16.3	5.2	1.1	0.3
	- 65세 이상	1.7	0.6	0.6	0.2
남자	전체(15세 이상)	28.5	10.3	1.9	0.7
	- 15-39세	17.5	6.9	3.2	1.2
	- 40-64세	10.0	3.2	1.2	0.4
	- 65세 이상	1.0	0.3	0.7	0.2
여자	전체(15세 이상)	21.2	8.4	1.6	0.7
	- 15-39세	14.3	6.2	2.9	1.3
	- 40-64세	6.2	2.0	0.9	0.3
	- 65세 이상	0.7	0.2	0.5	0.2

청년층의 인구이동을 성별로 살펴보면, 권역을 이동한 청년 남자는 약 18만 명, 청년 여자는 14만 명 수준이며 각각 3.2%와 2.9%의 이동률을 보였다. 한편,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은 청년 남자가 1.2%, 청년 여자가 1.3%로 나타나 전체적인 권역 간 이동률은 남자가 더 높지만, 수도권으로 이동 비율은 여자가 다소 높았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남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66.4%, 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자 중 청년 비율은 73.5%로 집계되어, 청년층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의 수도권 이동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층 내 성별 이동 패턴의 차이를 시사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림 3-1> 수도권 이동자 연령 구성비, 2022→2023년



2. 세부 권역별 이동

가. 권역 간 이동

청년층의 권역 간 이동을 5극3특 권역별로 분석하기 위해, 이동자 수를 2022년 지역 기준의 유출 인구와 2023년 지역 기준의 유입 인구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이동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3-2>과 같이 권역별 유출인구는 2022년 권역별 인구에서 해당 권역 비이동자를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유입인구는 2023년 권역별 인구에서 비이동자를 제외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순이동자 수는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차감한 값이며, 이를 2022년 권역별 인구로 나누어 순이동률을 산출하였다.

<그림 3-2> 유입·유출에 따른 인구구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청년층 순이동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5%)과 충청권(0.4%)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음(-)의 값을 보여,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동률이 낮은 권역은 5극 중 대경권(-1.1%), 동남권(-1.1%), 서남권(-1.0%), 3특 권역 중에서는 전북(-1.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들은 청년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로 2024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남권(대경권·동남권)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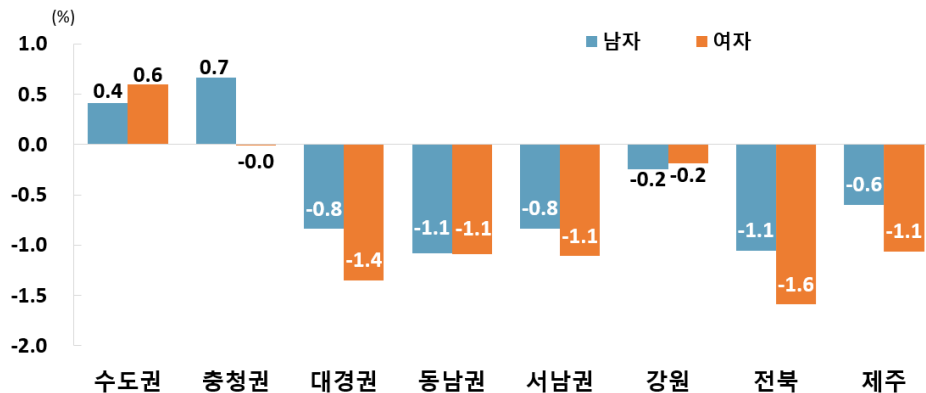
순이동률을 성별로 보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여자(0.6%)의 순이동률이 남자(0.4%)보다 높게 나타나 여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더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북과 대구·경북권 여자 청년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유출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 청년층 권역별 이동자 수 및 순이동률, 2022→2023년

(단위: 만 명, %)

2022년 지역	전체 인구 수 (A)	이동자 수				순이동률 (C-B)/A
		유출(B)	수도권이동	유입(C)	순이동 (C-B)	
전국	1,046.2	31.8	13.1	31.8	0.0	0.0
수도권	598.1	10.1	-	13.1	3.0	0.5
충청권	109.8	6.0	4.3	6.4	0.4	0.4
대경권	82.6	3.9	2.0	3.1	-0.9	-1.1
동남권	134.4	5.0	2.7	3.5	-1.5	-1.1
서남권	55.2	2.3	1.3	1.8	-0.5	-1.0
강원	25.3	1.9	1.4	1.9	-0.1	-0.2
전북	28.4	1.7	0.9	1.4	-0.4	-1.3
제주	12.3	0.8	0.5	0.7	-0.1	-0.8

<그림 3-3> 청년층 권역 간 순이동률, 2022→2023년



나. 권역 내 이동

소득이 있는 청년의 3.2%에 해당하는 약 33만 명은 5극3특 권역 간 이동이 아닌 동일 권역 내 하위 시도 간 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이 권역 내 시도이동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은 2%대의 이동률을 보여 수도권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 중 동남권의 이동률이 2.3%로 가장 낮았다.

종합하면, 권역 간·권역 내 이동 양상 및 순이동률을 종합하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청년은 많고, 수도권 거주 청년은 수도권 밖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은 채 주로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 청년의 수도권 이동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은 향후 청년층 지역 이동과 노동시장, 정주 여건 분석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필요가 있다.

<표 3-3> 청년층 성별 권역 내 이동자 수 및 이동률, 2022→2023년

(단위: 만 명, %)

성별	2022년 지역	전체 인구 수(A)	권역 내 시도 이동	
			이동자 수(B)	이동률(B/A)
남녀 전체	전국	1046.2	33.0	3.2
	수도권	598.1	23.9	4.0
	충청권	109.8	2.6	2.4
	대경권	82.6	2.1	2.5
	동남권	134.4	3.1	2.3
	서남권	55.2	1.3	2.4
남자	전국	551.6	17.0	3.1
	수도권	305.8	12.1	3.9
	충청권	60.7	1.4	2.3
	대경권	45.9	1.2	2.5
	동남권	73.7	1.7	2.3
	서남권	29.7	0.7	2.3
여자	전국	494.6	16.0	3.2
	수도권	292.4	11.8	4.1
	충청권	49.1	1.2	2.5
	대경권	36.7	0.9	2.5
	동남권	60.8	1.4	2.3
	서남권	25.5	0.6	2.5

제2절 권역 간 이동과 소득변화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 이동이 소득 상향을 견인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와 같이, 소득이동통계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지역 간 이동은 소득을 높이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 이동 방향별(비수도권↔수도권), 성별 등 하위 특성을 비교하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역을 이동한 소득이 있는 청년의 소득 변화를 수도권/비수도권 관점과, 권역(5급)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만 권역별 분석에서는 3개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의 지역 이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분석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한정하였다.

1.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가. 소득 금액(절대적 소득이동)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소득은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집단의 평균소득은 2022년 2,439만 원에서 2023년 2,996만 원으로 증가하여 증감률은 22.8%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의 평균소득 증감률(각각 11.2%, 12.1%)은 물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감률(7.6%)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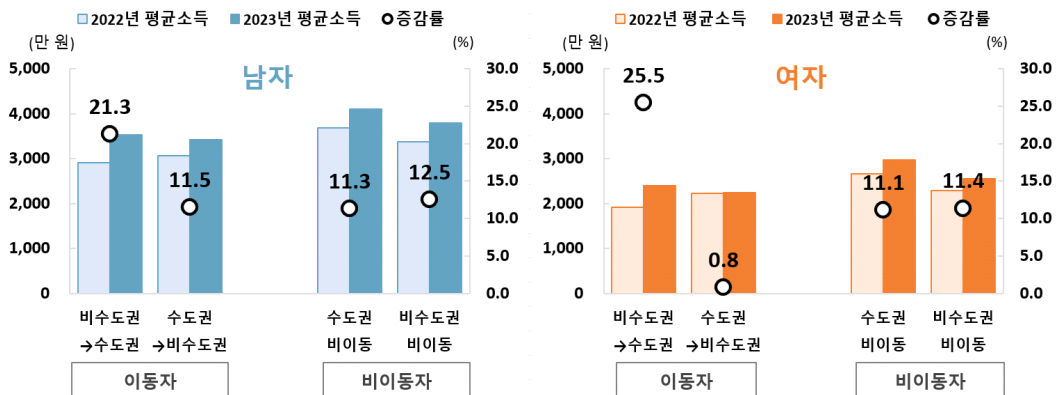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남자의 소득은 21.3%, 여자는 25.5%로 증가하여 여자의 개선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자의 소득 증감률(25.5%)은 반대 방향(수도권→비수도권) 이동 시의 증감률(0.8%)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매우 크다. 한편, 남자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수도권·비수도권 비이동 청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수도권→비수도권 이동 시 남자와 여자의 소득 변화 양상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동 전 소득 수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녀 모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2022년 소득이 비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던 반면, 2023년 소득은 같은 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수도권→비수도권 이동자와 비수도권 비이동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자의 2022년 소득은 1,918만 원으로 다른 비교 집단보다 낮아, 이후 소득 증감률이 더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던 저소득 여자 청년에게 수도권 이동이 소득 개선 측면에서 유의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4> 청년층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 만 원, %)

성별	기준년도	이동자		비이동자	
		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남녀 전체	2022년	2,439	2,693	3,187	2,884
	2023년	2,996	2,897	3,545	3,233
	증감률	22.8	7.6	11.2	12.1
남자	2022년	2,911	3,069	3,683	3,374
	2023년	3,531	3,423	4,100	3,796
	증감률	21.3	11.5	11.3	12.5
여자	2022년	1,918	2,222	2,670	2,287
	2023년	2,406	2,239	2,966	2,547
	증감률	25.5	0.8	11.1	11.4

<그림 3-4> 청년층의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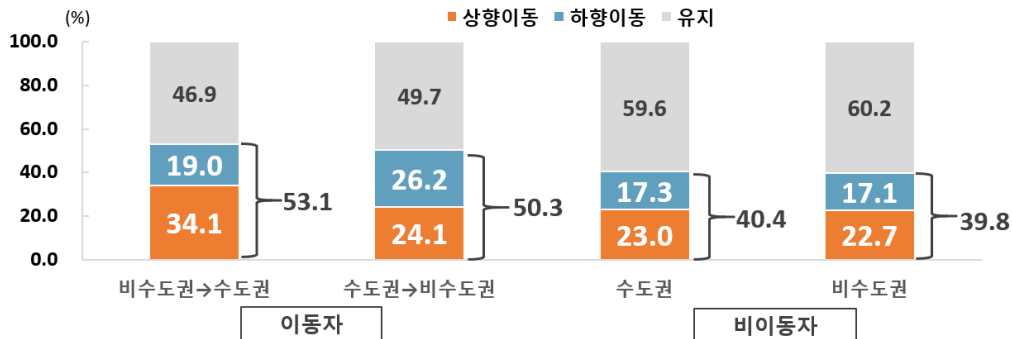
나. 소득 분위(상대적 소득이동)

소득이동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다른 국가승인통계와 동일하게 5분위 소득분위를 활용한다. 이는 분석 대상 인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한 후 동일한 비율(20%)의 5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5분위는 상위 20%, 1분위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한다. 특히 1분위는 정책적으로 중점적인 관찰이 필요한 계층이다. 본 분석에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개인의 소득분위를 산정한 후, 2022~2023년 소득분위 전이행렬을 구성하여 2023년 분위가 2022년보다 상승한 경우를 '상향이동', 하락한 경우를 '하향이동'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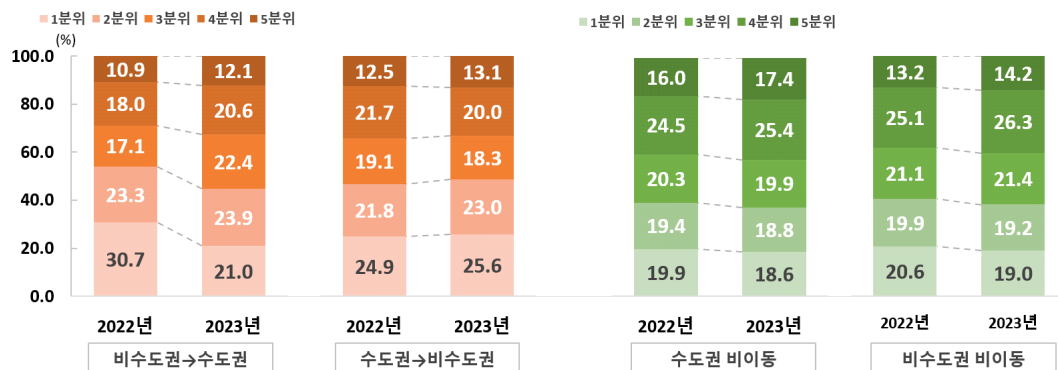
분석 결과, 상대적 소득 이동성 역시 이동 방향과 무관하게 이동자가 비이동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전체 소득 이동성은 53.1%,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50.3%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상향·하향이동의 구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경우 이동성 53.1% 중 상향이동이 34.1%, 하향이동이 19.0%로 상향이동 비중이 더 컸다. 반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상향이동이 24.1%, 하향이동이 26.2%로 하향이동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 분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소득 하락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소득분위 구성비를 비교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1분위 비율은 2022년 30.7%에서 2023년 21.0%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5분위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분포가 이전보다 다소 균형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림 3-5>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그림 3-6>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여부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소득 이동성을 성별로 나눠보면, 전체 소득 이동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남자의 소득 이동성은 51.8%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4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자 역시 수도권 이동 시 54.6%, 비수도권 이동 시 52.1%로 수도권 이동 시 소득 이동성이 더 높았다. 다만, 이동성 내 상향이동 비율의 비중은 남자가 더 높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자는 상향이동보다 하향이동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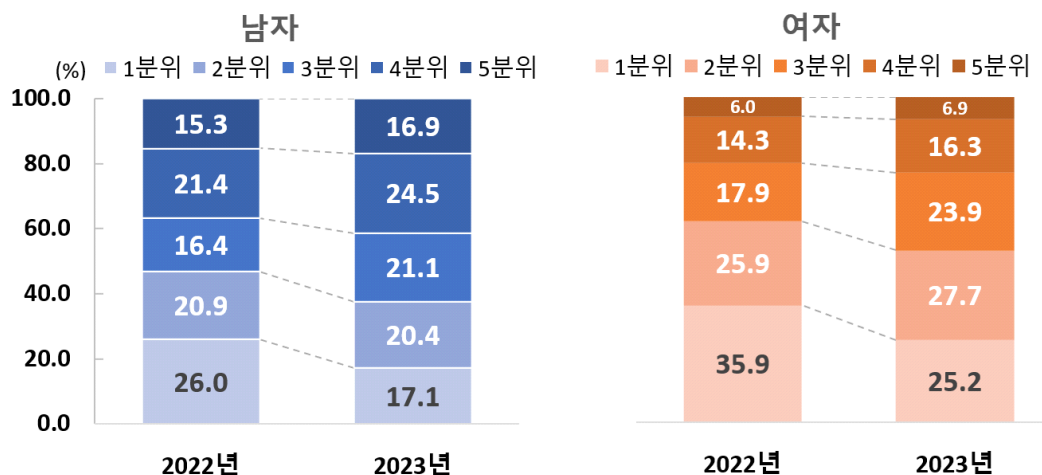
소득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남자의 소득 1분위 비율은 26.0%, 여자는 35.9%로 나타나, 여자 이동자가 하위 소득 분위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 소득 상향이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1분위 분포 비율도 개선되었으며, 특히 남자보다 여자 청년에게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표 3-5> 수도권/비수도권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단위: %)

	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계	100.0	100.0	100.0	100.0
상향이동	33.4	34.9	25.6	22.3
하향이동	18.4	19.8	23.3	29.8
유지	48.2	45.4	51.1	47.9

<그림 3-7>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분위 구성비 변화, 2022→2023년



2. 권역 간 이동

가. 소득 금액(절대적 소득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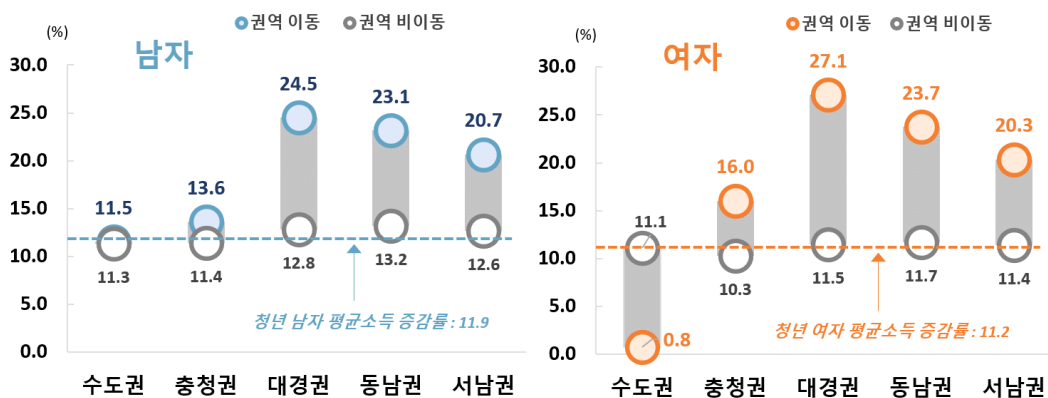
권역 간 이동을 경험한 청년의 소득 변화를 2022년 유출 권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증감률은 대경권(25.4%), 동남권(23.3%), 서남권(20.5%), 충청권(14.4%), 수도권(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권역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의 소득 증감률과 비교할 경우, 비수도권 4개 권역에서는 모두 권역 간 이동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역 간 이동 자체가 비수도권 청년의 소득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대경권과 동남권 청년에게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앞선 수도권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 소득 증가 효과가 제한적인 경향을 보인다.

<표 3-6> 유출권역별 청년층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만 원, %)

구분			전국	2022년 유출 권역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서남권
권역 간 이동	평균 소득	2022년	2,552	2,693	2,686	2,330	2,516	2,432
		2023년	2,951	2,897	3,074	2,923	3,104	2,932
	증감률		15.6	7.6	14.4	25.4	23.3	20.5
권역 간 비이동	증감률		11.5	11.2	11.0	12.3	12.7	12.2

<그림 3-8> 유출 지역별 권역 간 이동에 따른 청년층 평균소득 증감률, 2022→2023년



성별로 보면, 권역 간 이동 여부에 따른 소득 증감률 격차는 여자가 남자보다 크게 나타난다. 특히 대경권 여자는 그 차이가 15.7%p에 달하며, 동남권(12.1%p)과 수도권 여자(-10.3%p)도 차이가 큰 편이다. 다만 수도권 여자는 권역 간 이동자보다 비 이동자의 소득 증감률이 더 높은 유일한 경우로 나타난다.

이동 경로별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22년 유출 권역을 기준으로 하고 2023년 도착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경권에서 출발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에서 출발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감률은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에도 소득 증감률이 17.9%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3-7> 유출 지역별 권역 간 이동에 따른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22→2023년
(단위: 만 원, %, %p)

성별	2022년 유출지역	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이동			증감률 차이 (A-B)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A)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B)	
남녀 전체	수도권	-	-	-	2,693	2,897	7.6	-
	충청권	2,646	3,119	17.9	2,789	2,959	6.1	11.8
	대경권	2,254	2,942	30.5	2,408	2,904	20.6	9.9
	동남권	2,483	3,108	25.1	2,557	3,099	21.2	3.9
	서남권	2,282	2,922	28.0	2,621	2,945	12.4	15.7
남자	수도권	-	-	-	3,069	3,423	11.5	-
	충청권	3,191	3,735	17.0	3,290	3,486	6.0	11.1
	대경권	2,717	3,438	26.5	2,785	3,418	22.7	3.8
	동남권	2,945	3,617	22.8	3,027	3,737	23.5	-0.6
	서남권	2,664	3,405	27.8	3,042	3,455	13.6	14.3
여자	수도권	-	-	-	2,222	2,239	0.8	-
	충청권	2,032	2,427	19.4	2,072	2,204	6.4	13.0
	대경권	1,746	2,399	37.4	1,896	2,206	16.4	21.0
	동남권	1,962	2,532	29.1	1,886	2,188	16.0	13.1
	서남권	1,883	2,418	28.4	2,072	2,280	10.0	18.4

성별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남자 중 서남권(27.8%)과 대경권(26.5%) 출신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높으며, 여자는 대경권(37.4%) 출신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가장 높았다. 대경권과 동남권에서 이동한 남자는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와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의 소득 증감률 차이가 각각 3.8%p, -0.6%p로 크지 않았다. 반면 여자 청년은 이동 방향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대경권 여자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 소득 증감률이 37.4%인 반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는

16.4%에 그쳐 21.0%p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경권을 기준으로 볼 때, 남자 청년에게는 수도권 외 다른 비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소득 측면에서 일정 부분 유효할 수 있으나, 여자 청년에게는 수도권 이동이 소득 개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나. 소득 분위(상대적 소득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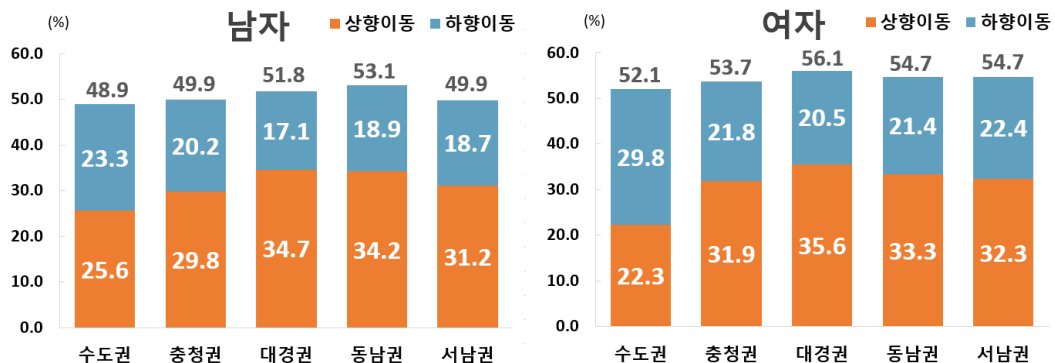
권역 간 이동을 경험한 청년의 상향 이동성은 29.5%로, 비이동 청년(22.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소득 분위 상향이동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유출 권역 기준으로 보면 대경권(35.1%)과 동남권(33.8%)에서 상향이동 비율이 높았고, 수도권은 24.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여자의 소득 이동성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여자 청년의 경우 상향이동보다 하향이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3-8> 유출지역별 권역 간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단위: %)

이동구분	2022년 유출지역	2022→2023년 소득분위 이동비율			
		합계	상향이동	하향이동	유지
권역 간 이동	전체	100.0	29.5	22.1	48.4
	수도권	100.0	24.1	26.2	49.7
	충청권	100.0	30.7	20.9	48.4
	대경권	100.0	35.1	18.7	46.3
	동남권	100.0	33.8	20.0	46.2
	서남권	100.0	31.7	20.4	47.9
권역 간 비이동	전체	100.0	22.8	17.2	60.0

<그림 3-9> 유출지역별 권역 간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제3절 권역 내 이동과 소득변화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동일 권역 내 인접 시도 경계를 이동한 청년 33만 명의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권역은 지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하나 이상의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은행(2023)은 직업 및 교육 요인을 중심으로 권역 내 거점도시로의 청년층 집중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여러 통계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거점도시의 중심 기능 회복과 강화가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고, 청년층에게 수도권의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권역 내 전통적인 거점도시 외에도 전남의 나주(에너지, 전력), 충북의 진천·음성(식품, 보건), 경남의 진주(공공주택, 항공 우주) 등 특화된 정책분야를 담당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곳곳에 조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 권역 내 거점도시에서 인근 핵심 도시로 이동할 유인 역시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금액(절대적 소득이동)

소득 금액 변화를 권역 간 이동자와 권역 내 시도 이동자와 비교하면, 수도권에서는 권역 내 시도이동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가장 높다. 반면 비수도권 4개 권역에서는 권역 간 이동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높게 나타났다. 두 이동 유형 간 소득 증감률 차이는 대경권(11.0%p), 서남권(8.5%p), 동남권(7.9%p) 순으로 컸으며, 충청권은 0.7%p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충청권 청년의 경우 권역 간 이동과 비교할 때 권역 내 시도 이동 역시 소득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0> 권역 간 및 권역 내 이동 청년의 평균소득 증감률, 2022→2023년



권역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을 다시 권역 내 시도이동자와 권역 내 시도 비이동자로 구분해 비교하면, 서남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은 권역 내 시도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비이동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그 격차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한편, 서남권은 권역 내 시도이동자보다 비이동자의 소득 증감률이 더 높아, 소득 증가만으로는 권역 내 시도 이동을 유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2024)은 서남권 청년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권은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으며, 농어업 및 건설업 등의 취업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전국에 비해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낮으며, 특히 정보 통신업 및 금융업 관련 일자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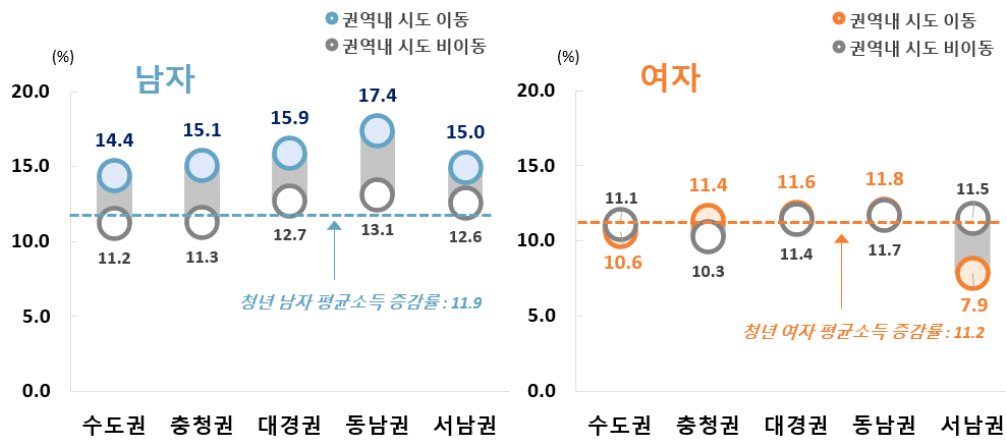
<표 3-9> 권역 간 및 권역 내 이동의 평균소득 변화, 2022→2023년

(단위: 만 원, %)

'22년 지역	권역 간 비이동						권역 간 이동
	권역 내 시도 이동			권역 내 시도 비이동			평균소득 증감률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전체	3,149	3,563	13.2	3,060	3,413	11.6	15.6
수도권	3,341	3,770	12.8	3,181	3,535	11.2	7.6
충청권	2,784	3,165	13.7	3,098	3,436	10.9	14.4
대경권	2,666	3,049	14.4	2,880	3,233	12.3	25.4
동남권	2,538	2,930	15.4	2,875	3,238	12.6	23.3
서남권	2,566	2,875	12.0	2,823	3,167	12.2	20.5

성별로 살펴보면, 권역 내 시도 이동에 따른 소득 증감률은 모든 권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격차는 서남권에서 7.1%p로 가장 컸으며, 동남권(5.6%p), 대경권(4.3%p)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남자는 시도 이동자와 시도 비이동자의 소득 증감률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여자는 시도 이동자와 비이동자의 소득 증감률 차이가 크지 않고, 여자 전체 평균소득 증감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또한, 여자의 경우 권역 내 시도 이동자가 비이동자보다 소득 증감률이 낮은 권역이 수도권과 서남권 두 곳으로, 특히 서남권에서는 그 차이가 -3.6%p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 여자의 소득 증감률이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2022년과 2023년 평균소득 수준이 다른 권역보다 높은 반면, 서남권 청년 여자는 소득 수준과 증감률이 모두 낮아 인근 시도로 이동하는 것이 소득 측면에서 뚜렷한 이점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11> 권역내 이동여부에 따른 청년층 소득변화, 2022→2023년>



<표 3-10> 권역 내 이동 지역에 따른 평균소득 변화, 2022→2023년

(단위 : 만 원, %)

성별	지역	권역 내 시도 이동			권역 내 시도 비이동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남자	수도권	3,885	4,445	14.4	3,675	4,086	11.2
	충청권	3,274	3,767	15.1	3,632	4,042	11.3
	대경권	3,063	3,550	15.9	3,372	3,801	12.7
	동남권	2,983	3,503	17.4	3,385	3,829	13.1
	서남권	2,883	3,314	15.0	3,311	3,728	12.6
여자	수도권	2,788	3,083	10.6	2,665	2,961	11.1
	충청권	2,221	2,474	11.4	2,434	2,684	10.3
	대경권	2,169	2,420	11.6	2,263	2,522	11.4
	동남권	1,997	2,232	11.8	2,258	2,522	11.7
	서남권	2,219	2,394	7.9	2,254	2,514	11.5

2. 소득분위(상대적 소득이동)

권역 내 시도 이동을 경험한 청년의 소득 분위 이동성은 여자가 48.8%, 남자가 43.8%로 전체 이동성 수준은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성의 구성 측면에서는 성별 차이가 관찰된다. 여자의 상향이동은 25.8%, 하향이동은 23.0%, 남자의 상향이동은 26.3%, 하향이동은 17.5%로 상향이동성은 남자가 높고, 하향이동성은 여자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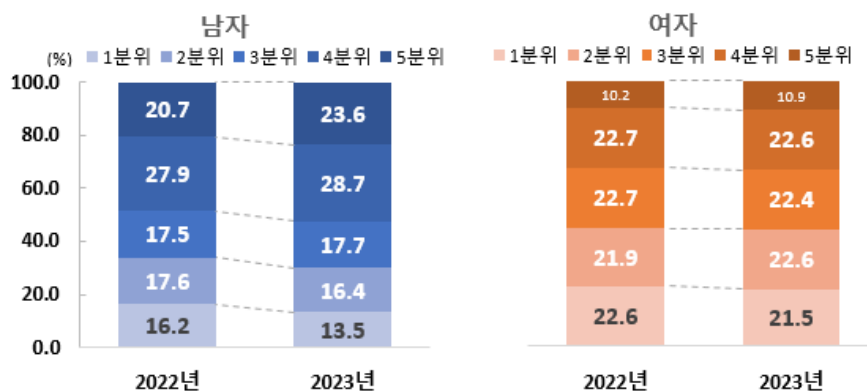
권역 내 시도 이동 청년의 소득분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시도를 이동한 남자의 48.6%가 2023년 기준 4·5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사이 두드러진 변화가 관찰되진 않는다. 이는 권역 내 이동이 남자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소득 상향이동과 연계되는 반면, 여자 청년에게는 소득 분포 구조를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11> 권역 내 시도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 비율

(단위: %)

	권역 내 시도 이동		권역 내 시도 비이동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계	100.0	100.0	100.0	100.0
상향이동	26.3	25.8	22.2	23.3
하향이동	17.5	23.0	16.0	18.4
유지	56.2	51.2	61.8	58.4

<그림 3-12> 권역 내 시도 이동한 청년의 소득분위 구성비 변화



제4절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개인의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층의 권역 이동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이동 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를 수도권 중심과 권역(5극)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권역 간 이동 인구의 63.9%가 청년층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권역 간 이동자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의 69.6%가 청년층에 해당하였다. 이는 인구 이동의 주요 연령층이 청년층임을 보여주며,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청년 이동 분석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권역 간 이동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 내 이동률은 수도권이 가장 높고, 동남권이 가장 낮았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은 순유입을 보였지만 그 외 지역은 순유출 양상을 보였다.

소득변화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보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소득과 소득 분위는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특히 여자 청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비이동자보다 소득 상승 폭이 작고, 소득 이동성도 하향이동 비율이 상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역 간 이동 관점에서 보면, 대경권·동남권·서남권 출신 청년의 소득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여자의 소득 증감 효과가 남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대경권 여자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소득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역 간 이동이 단순한 지역 이동을 넘어, 특정 집단에게는 소득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권역 내 시도이동 청년은 권역 간 이동 청년보다 소득 증감률이 낮고(수도권 제외), 전반적으로 여자의 소득 증감률이 남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권역 내 시도 이동과 시도 비이동자의 격차에서도 여자는 두 집단 간 격차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비이동자보다 낮은 소득 증감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특히 여자 청년에게 권역 내 이동보다는 권역 간 이동이, 나아가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소득 상승의 기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3장의 분석을 종합하면,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성별·권역별로 상이한 소득 효과를 동반하며,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소득 수준이 비수도권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이 소득 상승을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그 효과는 대경권·동남권·서남권 청년에게서 두드러졌으며,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 상승은 양질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여건의 차이는 기업생멸행정통계와 지역별 고용조사 등 다른 국가 승인통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대기업 종사자 수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특히 서남권의 대기업 종사자 수는 12만 명으로, 수도권의 3.4% 수준에 불과해, 5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대기업 종사자는 충청권·대경권·동남권의 경우 약 60%가 남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비수도권에서 여자의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권역별 산업분류별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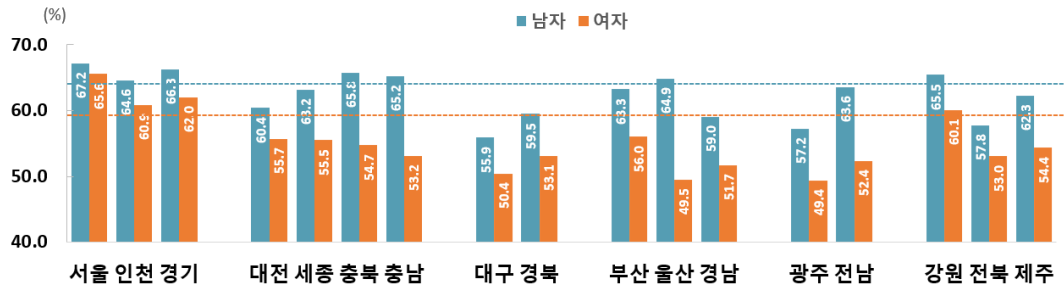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기업 규모	권역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설관리업	기타
대기업	수도권	3,516	1081	149	453	276	301	453	803
	충청권	294	182	10	5	1	2	24	70
	대경권	197	117	10	6	14	5	10	35
	동남권	289	176	12	15	18	14	11	43
	서남권	120	42	18	3	4	3	8	42
중소기업	수도권	10,202	1,671	593	1,974	535	67	749	4,613
	충청권	1,832	406	172	306	107	4	105	732
	대경권	1,538	372	137	268	97	3	74	587
	동남권	2,546	612	189	425	195	5	143	977
	서남권	978	145	125	175	71	1	46	415

※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2023년)

아울러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여자 청년의 고용률은 낮은 반면, 취업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청년 고용률을 보면 남자는 대구·경북·경남·광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지역 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반면 여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울산·광주·경남에서 여자 청년 고용률이 낮게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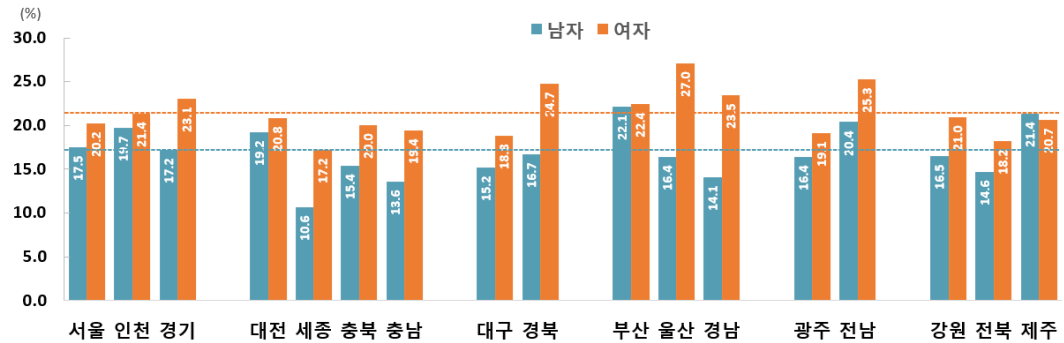
<그림 3-13> 시도별 청년 성별 고용률, 2024년 하반기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마이크로데이터

또한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북·울산·경남·전남에서는 여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통계 결과와 본 장의 분석을 종합하면,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에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소득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 시도별 청년 성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구성비, 2024년 하반기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마이크로데이터

제 4 장

장기 소득 이동성 및 청년층 연령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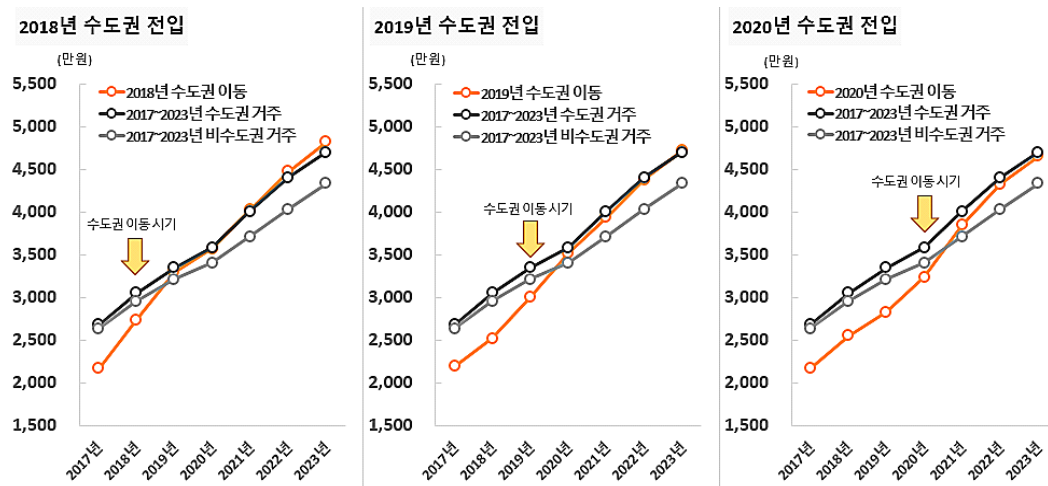
제1절 장기 소득 이동성 분석

1. 수도권 전입시기별 소득성장 추이

제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소득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2023년 특정 시점의 단기적 현상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동 직전 낮은 소득 수준이 기저효과로 인해 일시적인 증가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전입 시점별로 수도권 이동 청년의 이후 소득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2017년 이후 신규 노동시장 진입 청년은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수도권 이동자’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속 거주자’를 구분하고, 전입 시점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동한 집단을 나누어 평균소득을 산출하였다.

<그림 4-1> 수도권 전입 시점에 따른 이주 청년의 소득변화, 2017→2023년



분석 결과,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수도권 이동 청년들은 이동 직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나, 이동한 해에 평균소득 증감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후 이동 다음 해부터는 비수도권 지속 거주 청년의 평균소득을 상회하며, 수도권 지속 거주 청년의 소득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 중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 향상을 경험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 증감률이 전입 이후 약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점차 수도권 지속 거주 청년의 증감률 수준으로 수렴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2019년, 2020년 이동자의 소득 상승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경기 충격 국면에서도 지역 이동을 결정한 청년들의 소득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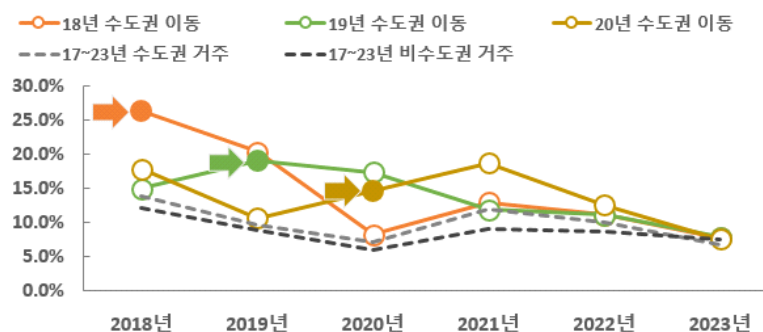
<표 4-1> 수도권 전입 시점에 따른 이주 청년의 소득 증감률, 2017→2023년

(단위: %)

구분	이동시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도권 이동	2018년	26.4	20.4	8.2	12.9	11.1	7.7
	2019년	15.0	19.1	17.4	11.9	11.1	7.8
	2020년	17.8	10.6	14.6	18.7	12.6	7.5
비이동	수도권 거주	13.9	9.7	7.0	11.9	9.9	6.7
	비수도권 거주	12.1	8.9	6.0	9.0	8.6	7.5

요약하면, 수도권 이동에 따른 소득 상승 효과는 특정 연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입 시기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이며, 이동한 해부터 1~2년 간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향후 소득이동통계 데이터가 더 축적될 경우, 수도권 신규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초기 정착 지원 정책의 시기별 효과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2> 수도권 전입 시점에 따른 이주 청년의 소득 증감률, 2017→2023년



<표 4-2> 수도권 전입 시점에 따른 이주 청년의 소득변화, 2017→2023년

(단위: 만 원)

구분	기준 연도	[이동자] 비수도권 → 수도권			[비이동자] 수도권 / 비수도권	
		2018년 이동 후 수도권 거주	2019년 이동 후 수도권 거주	2020년 이동 후 수도권 거주	2017~2023년 수도권 거주	2017~2023년 비수도권 거주
전체	2017년	2,166	2,189	2,167	2,679	2,633
	2018년	2,738	2,517	2,553	3,050	2,952
	2019년	3,296	2,998	2,825	3,344	3,214
	2020년	3,566	3,519	3,238	3,579	3,405
	2021년	4,026	3,937	3,844	4,005	3,710
	2022년	4,474	4,374	4,327	4,400	4,028
	2023년	4,820	4,716	4,650	4,694	4,329
남자	2017년	2,404	2,495	2,573	3,064	3,027
	2018년	3,035	2,826	2,994	3,479	3,370
	2019년	3,658	3,364	3,282	3,801	3,654
	2020년	3,984	4,009	3,794	4,077	3,869
	2021년	4,505	4,510	4,462	4,574	4,220
	2022년	5,075	5,040	5,084	5,042	4,602
	2023년	5,496	5,425	5,450	5,374	4,963
여자	2017년	1,810	1,750	1,620	2,192	2,021
	2018년	2,292	2,073	1,960	2,509	2,303
	2019년	2,752	2,472	2,210	2,769	2,529
	2020년	2,938	2,815	2,490	2,951	2,683
	2021년	3,306	3,116	3,013	3,288	2,918
	2022년	3,571	3,417	3,308	3,592	3,136
	2023년	3,804	3,697	3,575	3,836	3,345

2. 2017~2023년 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본 절에서는 분석 기간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도 종단 연계가 아니라,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확장하여 소득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7년과 2023년 양 기간 모두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7년의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지역 이동을 거쳐 2023년에 어떤 지역에 정착해 있고, 2017년 대비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2017년에서 2023년까지 권역별 이동 규모를 보면, 5극 중 수도권과 3극의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유입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 제주의 순이동률이 7.3%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동자 수가 가장 적었고, 수도권은 유출과 유입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가운데 순이동률이 3.8%로 나타났다. 반면 대경권(-7.0%), 동남권(-6.4%), 서남권(-4.4%)은 음(-)의 순이동률을 보여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개 년도 분석에서 확인된 수도권의 순유입, 대경권·동남권·서남권의 순유출 흐름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장기 데이터에서는 충청권과 제주의 순이동 방향이 단기 데이터와 반대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데이터에서 순유입이 관측된 충청권 청년들의 이동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3> 청년층 권역별 유입/유출 현황, 2017→2023

(단위: 만 명, %)

권역	전체 인구 (A)	이동자 수			순이동률 (C-B)/A
		유출(B)	유입(C)	순이동(C-B)	
수도권	586.0	32.5	55.1	22.5	3.8
충청권	113.2	22.4	21.5	-0.9	-0.8
대경권	90.1	15.9	9.6	-6.3	-7.0
동남권	148.9	20.6	11.1	-9.5	-6.4
서남권	57.6	9.0	6.5	-2.6	-4.4
강원	26.5	7.4	6.4	-0.9	-3.6
전북	31.0	7.4	4.2	-3.2	-10.4
제주	12.5	2.3	3.2	0.9	7.3

2017년~2023년 소득 증감률을 살펴보면, 권역 간 이동 청년이 권역 간 비이동 청년(시도 이동 및 시도 비이동)보다 소득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22~2023년 단기 분석 결과보다 절대적인 변화 폭은 크지만, 전반적인 방향성과 흐름은 동일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권역 내 시도이동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득 상승을 경험하지만, 여자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타 권역으로 이동한 여자는 소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권역 간 이동 청년과 권역 내 시도 비이동 청년의 소득 증감률 차이를 보면, 남자는 동남권(53.4%p), 대경권(49.3%p)에서, 여자는 대경권(51.9%p)과 충청권(47.1%p)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청년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권역 출발 청년 대비 소득 상승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비이동자보다도 소득 증감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 유출 지역에 따른 이동 유형별 성별 소득 증감률 비교, 2017→2023년



<표 4-4> 유출 지역별 평균소득 및 증감률, 2017→2023년

(단위: 만 원, %)

성별	2017년 유출지역	권역 간 이동			권역 간 비이동					
					권역 내 시도이동			권역 내 시도 비이동		
		2017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17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17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전 체	수도권	2,148	3,801	76.9	2,393	4,542	89.8	2,417	4,230	75.0
	충청권	2,007	4,144	106.5	2,293	4,082	78.0	2,526	4,125	63.3
	대경권	1,920	4,126	114.9	2,084	3,737	79.3	2,322	3,826	64.8
	동남권	1,891	4,064	114.9	2,081	3,783	81.8	2,344	3,860	64.7
	서남권	1,904	4,059	113.2	1,945	3,626	86.5	2,253	3,822	69.6
남 자	수도권	2,445	4,498	84.0	2,737	5,378	96.5	2,808	4,895	74.3
	충청권	2,404	4,889	103.3	2,690	4,821	79.2	3,000	4,833	61.1
	대경권	2,264	4,834	113.6	2,449	4,424	80.6	2,737	4,495	64.2
	동남권	2,186	4,742	116.9	2,439	4,485	83.9	2,783	4,550	63.5
	서남권	2,241	4,803	114.3	2,267	4,306	90.0	2,650	4,488	69.4
여 자	수도권	1,734	2,828	63.1	1,991	3,565	79.0	1,967	3,464	76.1
	충청권	1,475	3,175	115.2	1,744	3,060	75.5	1,887	3,172	68.1
	대경권	1,430	3,117	118.0	1,581	2,790	76.5	1,757	2,916	66.0
	동남권	1,458	3,072	110.7	1,574	2,788	77.1	1,748	2,926	67.4
	서남권	1,474	3,113	111.2	1,547	2,785	80.1	1,746	2,971	70.1

제2절 청년층 연령분화 분석

청년층은 대학 입학, 졸업, 취업, 이직, 결혼 등 생애주기 전환이 짧은 기간 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정책 및 통계에서 청년층의 정의와 연령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돼 왔으며, 국가 통계별로 생산 목적과 자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연령 범주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졸업, 취업, 결혼, 첫 출산 시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추세로, 2024년 인구동향조사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이며,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부(父) 35.4세, 모(母) 33.1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청년' 범주에서 보다 세분화된 연령 구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절에서는 연령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청년층을 20~29세(이하 20대)와 30~39세(이하 30대)로 구분하여 지역이동에 따른 소득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대는 대학 졸업과 진로탐색 및 첫 취업을 경험하는 '사회 진입기'로 비교적 지역 이동이 활발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30대는 축적된 경력과 안정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정착·확장기'이며, 지역 이동 시 주거비, 보육 환경, 생활 기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만, 연령을 세분화하면 해석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동자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권역별로 분해할 경우 일부 하위 집단에서는 관측치가 지나치게 작아져 상대표준오차(RSE)가 크게 증가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은 이동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본 절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30대 여자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분석 대상(양기간 모두 소득이 있는 인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이동자 수도 제한된다. 따라서 본 절의 분석 결과는 개별 권역이나 세부 집단에 대한 정밀한 추정보다는, 연령대별 전반적인 이동 및 소득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고 20대와 30대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1. 이동자수 및 이동률

20대와 30대의 권역 간 이동 및 권역 내 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30대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권역에서 20대의 이동률이 높고, 유출·유입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사회 진입기에 해당하는 20대가 학업

과 취업 기회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이동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층 인구 이동이 주로 2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권역별 순이동률을 보면, 두 집단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입률을 보이지만, 20대는 수도권(1.1%), 30대는 충청권(0.7%)의 순이동률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20대에서는 수도권 외 모든 권역이 순유출을 보이고 있고, 30대에 비해 순유출 규모도 커 20대에게 수도권이 일자리 확보 및 소득상승 기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경권은 20대 순이동률(-2.3%)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30대가 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충청권 순유입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30대가 정착과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청권이 비수도권 중에서 지역적 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30대 동남권의 순이동률(-0.5%)은 5개 권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대경권은 20대, 동남권은 30대에서 각각 순유출이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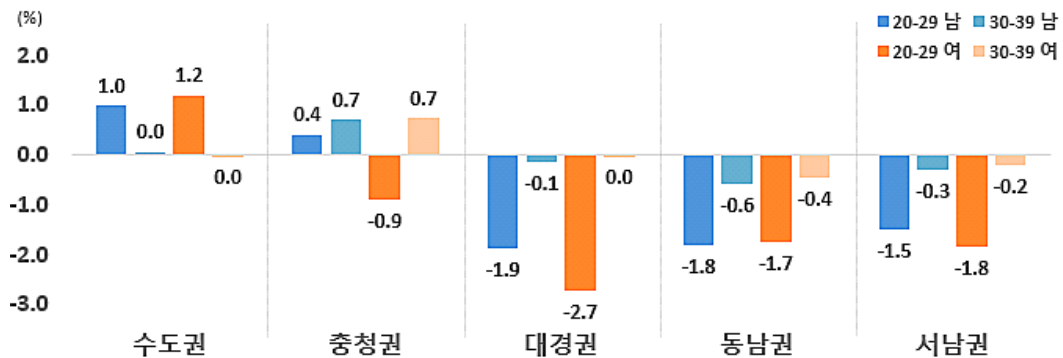
<표 4-5> 청년층 권역간 이동자 수 및 순이동률, 2022→2023년

(단위: 만 명, %)

연령대	2022년 지역	전체 인구(A)	권역 간 이동자				권역 내 시도 이동자	
			이동자 수		이동률		이동자 수 (D)	이동률 (D/A)
			유출(B)	유입(C)	이동률 (B/A)	순이동률 (C-B)/A		
20대	수도권	249.2	5.2	7.9	2.1	1.1	10.4	4.2
	충청권	46.0	3.5	3.4	7.6	-0.2	1.3	2.8
	대경권	34.9	2.4	1.6	6.9	-2.3	1.1	3.1
	동남권	55.3	2.9	1.9	5.2	-1.8	1.6	2.9
	서남권	24.2	1.4	1.0	5.8	-1.6	0.7	2.8
30대	수도권	326.1	4.4	4.5	1.3	0.0	12.9	4.0
	충청권	59.4	2.2	2.7	3.8	0.7	1.2	2.1
	대경권	45.0	1.3	1.3	3.0	-0.1	0.9	2.1
	동남권	74.8	1.9	1.5	2.5	-0.5	1.4	1.8
	서남권	29.1	0.8	0.7	2.8	-0.2	0.6	2.0

성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수도권으로의 이동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대경·서남·동남권에서는 여자의 순유출 규모가 남자보다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대경권을 비교해 보면, 남자는 -1.9%, 여자는 -2.7%로 집계된다. 한편, 30대에서는 수도권 순유입이 약화되고, 충청권에서 남자(0.7%)와 여자(0.7%) 모두 순유입이 관측된다. 특히, 충청권 여자의 순이동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체 이동률이 순유입으로 전환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4-4> 연령대별 권역 간 순이동률,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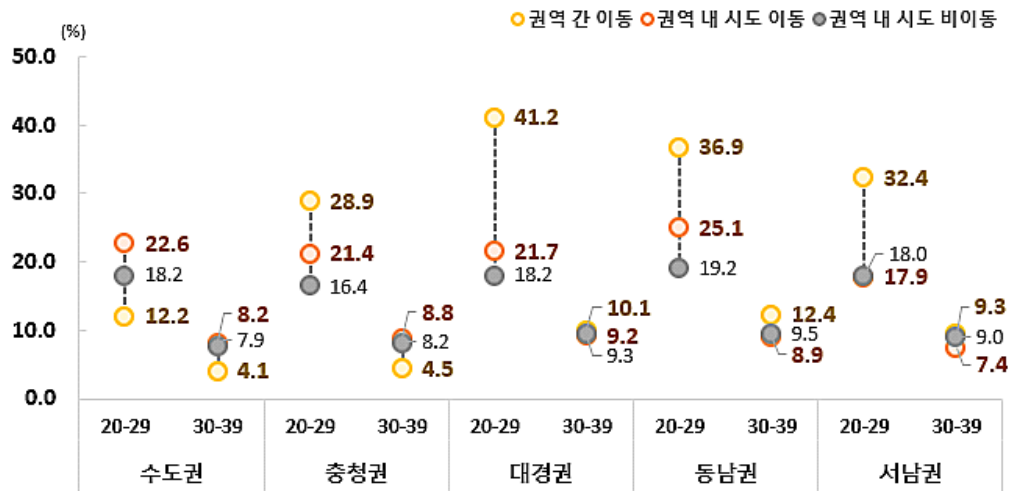


2. 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2022년과 2023년의 평균소득 변화를 비교하면, 20대는 이동 유형과 관계없이 30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소득 증감률을 보인다. 심지어 20대 권역 내 시도 비이동자도 30대보다 소득이 많이 개선됐는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2022년의 소득이 낮았던 것이 높은 증감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30대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증감률을 보이며, 이동 유형 간 소득 증감률 격차도 크지 않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권역 내 시도 이동자의 소득 증감률이 가장 높고, 비수도권 권역들에서는 대체적으로 권역 간 이동자의 소득 증감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때, 충청권은 20대에는 비수도권의 특징을, 30대에서는 수도권과 유사한 모습(권역 내 시도이동이 권역 간 이동보다 소득 측면에서 유리)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소득 증감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20대에서 대경권(42.1%), 30대에서는 동남권(12.4%)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권역 간 및 권역 내 이동 청년의 평균소득 증감률 비교, 2022→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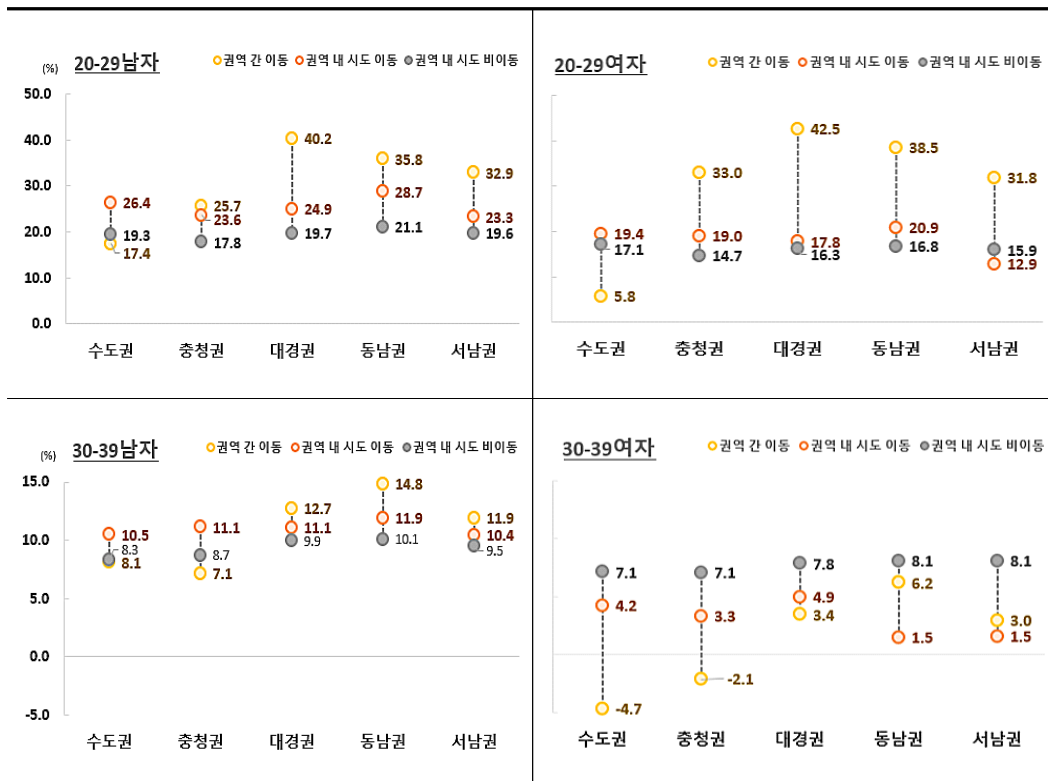
<표 4-6> 유출 지역별 평균소득 및 증감률 비교, 2022→2023년

(단위: 만 원, %)

연령 대	2022년 유출지역	권역 간 이동			권역 간 비이동					
					권역 내 시도이동			권역 내 시도 비이동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22년 평균소득	2023년 평균소득	증감률
20 대	수도권	2,018	2,265	12.2	2,354	2,887	22.6	2,232	2,639	18.2
	충청권	1,812	2,335	28.9	2,084	2,530	21.4	2,264	2,636	16.4
	대경권	1,786	2,522	41.2	1,977	2,406	21.7	2,137	2,526	18.2
	동남권	1,869	2,559	36.9	1,879	2,350	25.1	2,112	2,517	19.2
	서남권	1,870	2,474	32.4	2,034	2,399	17.9	2,137	2,521	18.0
30 대	수도권	3,740	3,894	4.1	4,262	4,613	8.2	4,096	4,419	7.9
	충청권	4,346	4,541	4.5	3,743	4,070	8.8	3,900	4,220	8.2
	대경권	3,586	3,949	10.1	3,576	3,906	9.2	3,561	3,892	9.3
	동남권	3,761	4,228	12.4	3,494	3,806	8.9	3,556	3,892	9.5
	서남권	3,697	4,041	9.3	3,289	3,532	7.4	3,519	3,837	9.0

성·연령별로 나눠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여자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양상임을 볼 수 있다. 20대 여자는 비수도권 권역에서 권역 간 이동자와 권역 내 이동자 혹은 비이동자와의 소득 증감률 격차가 남자보다 크다. 반면, 수도권 20대 여자는 권역 내 시도 이동 또는 비이동 시 소득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도권 선호 현상이 남자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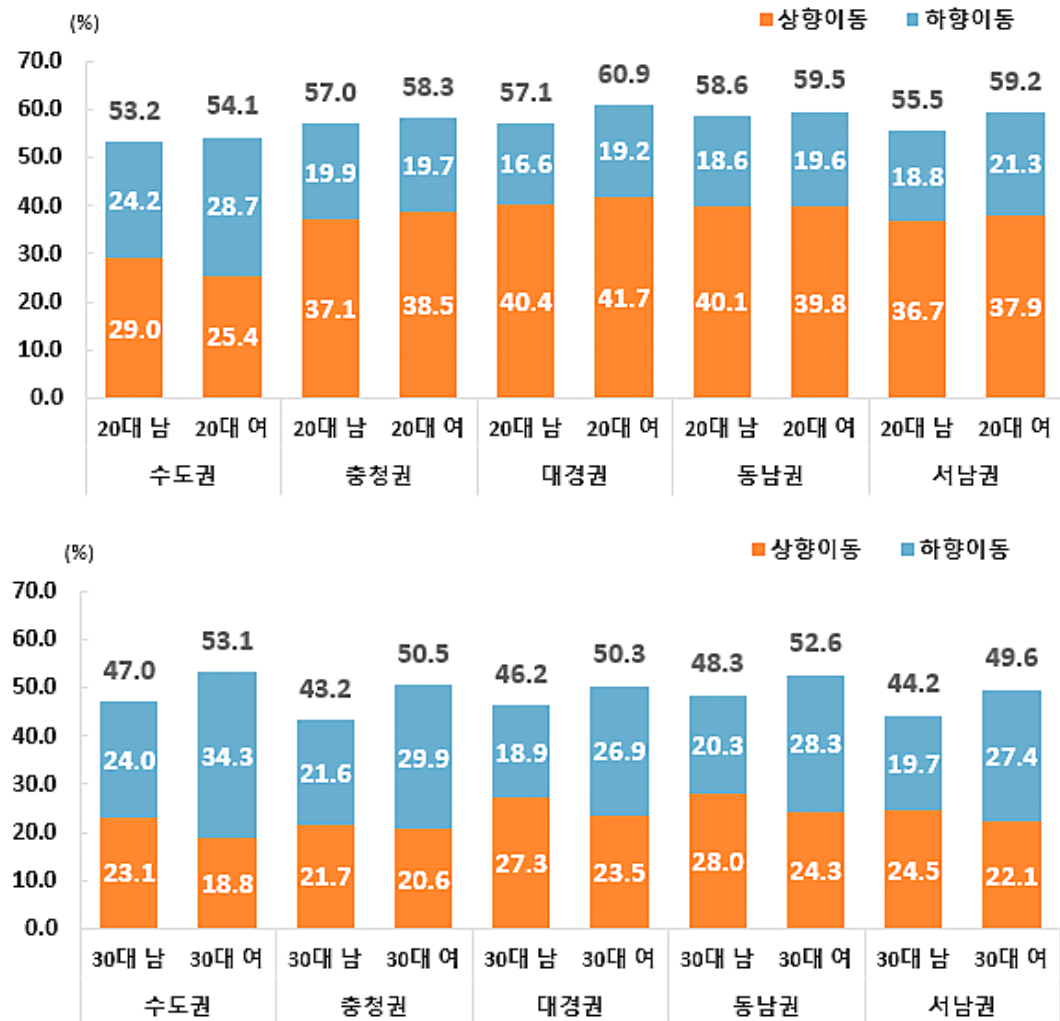
<그림 4-6> 성/연령별 이동 유형에 따른 청년 소득 증감률 비교, 2022→2023년



한편 30대 여자의 경우, 모든 권역에서 비이동자의 소득 증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심지어 수도권, 충청권 출신 30대 여자의 소득 증감률은 각각 -4.7%, -2.1%로 권역 간 이동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30대 남자의 경우, 이동 유형 중 권역 간 이동이 가장 높은 소득 증감률을 보이지만, 그 격차는 20대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다. 권역별로 보면, 권역 내 시도 이동에 따른 소득 증감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충청권, 권역 간 이동으로 인한 소득 증감률이 높은 권역은 동남권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권역 간 이동자가 비이동자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나, 권역 내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존재하거나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 일자리로 통근할 가능성이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위 이동성 분석에서는 권역 간 이동자 집단을 비교했을 때, 20대가 30대보다 훨씬 높은 상향이동성을 보인다. 20대는 비수도권 4개 권역에서 상향이동 비율이 30% 중반에 이르며, 특히 대경권과 동남권에서는 40%에 근접한다. 이는 앞서 20대의 평균소득 증감률이 높게 나타난 흐름과 일관된다. 반면, 30대에서는 전체적인 소득 이동성이 둔화되며, 30대 여자는 하향이동이 상향이동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30대 여자의 경우, 하향이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해 지역이동과 소득변화에 대하여 결혼, 출산, 육아, 거주지 변경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년층 이동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설계시 30대 여자처럼 소득 하향 위험이 큰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림 4-7> 유출지역별 권역 간 이동에 따른 소득분위 이동비율, 2022→2023년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개인의 소득 변화와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행정자료 기반의 소득이동통계를 활용하여 청년 개인 단위의 이동 전후 소득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주로 지역 차원의 인구 이동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한계를 넘어 지역 이동 이후의 소득 수준 변화와 소득분위 이동 양상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을 넘어 5극3특 권역 체계를 적용하고, 권역 간 이동과 권역 내 이동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지역 이동과 소득 변화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전체 권역 간 이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청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대경권·동남권·서남권에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되었다. 이는 청년층이 지역 이동의 중심 집단임과 동시에, 지역 간 인구 재배분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청년 이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 변화 측면에서는 권역 간 이동,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평균소득 증감률과 소득분위 상향이동 비율 모두에서 가장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이동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에 위치해 있었으나, 이동 이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이동 청년이나 비수도권 지속 거주 청년과의 격차를 상당 부분 축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소득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으며, 소득분위 하향이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이동 방향에 따라 소득 이동성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 중 대경권·동남권·서남권 출신 청년의 권역 간 이동에 따른 소득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성별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소득 이동성이 남자보다 높았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자 청년의 평균소득 증감률과 소득분위 상향이동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는 동일한 이동 유형이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소득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권역 내 이동은 소득 변화와 소득 이동성 측면에서 권역 간 이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수의 권역에서 권역 내 시도 이동은 평균소득 증감률과 소득분위 상향이동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 청년의 경우 권역 내 이동이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관측되었다. 이는 권역 내 이동이 소득 측면에서 권역 간 이동의 대안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동 유형별 소득 변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 소득 이동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이동 직후 소득 증감률이 크게 상승하며, 이후에도 비수도권 지속 거주 청년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권역 간 이동이 특정 연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소득 상승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령분화 분석 결과 이동에 따른 소득 변화의 양상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20대는 이동 유형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소득 증감률과 소득분위 상향이동성을 보인 반면, 30대는 이동 유형 간 소득 증감률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자의 경우 다른 연령·성별 집단과 비교하면 이동 이후 평균소득 증감률이 낮거나 정체되는 양상이 관측되는 등 다른 인구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청년층 내부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지역 이동과 소득 변화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소득 변화와 소득 이동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권역 간 이동이 소득 상향이동의 중요한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이동 구조가 지속될 경우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과 권역 간 소득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이동을 단순히 억제하기보다는, 비수도권에서도 청년이 소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다만 본 연구는 소득이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지니며, 향후에는 교육·산업·직종 등 추가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층 이동과 소득 변화의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2024). 통계플러스(2024년 가을호),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2024). 「2023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보도자료
-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2025).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17~2023년 소득이동통계 개발결과」 보도자료
- 국가통계연구원(현 국가데이터연구원)(2025). “소득이동통계 심층분석 연구”
- 지방시대위원회(2025).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보도자료
- 이은우(2005), “지역간 인구이동이 소득결정에 미친 영향”, 한국경제발전학회
- 강은택, 마강래(2012),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경년(2010), “지역 산업수요와 지역이동: 전문고 졸업생의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 최광성, 강동우, 최충(2018),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학회
- 한국은행(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 한국은행(2024), “광주 전남지역 청년고용 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 현대경제연구원(2025),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실태”, 현재경제연구원
- 한국고용연구원(2024),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 Statistics Canada. (2008), “Interprovincial mobility and earnings”.

Abstract**An Analysis of Income Mobility Associated with
Youth Population Migration****Seokmin Lee, Shinjeong Kw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migration and income changes of the youth population using Income Mobility Statistics, a large-scale longitudinal dataset based on administrative data. By tracking changes in income before and after migration,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examined how regional migration affected the income generation and mobility of the youth population. The analysis is closely associated with discussions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articularly given that the migr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aggravates the weakening of regional competitiveness in the situation of ongoing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youth aged 15 to 39 with employee and self-employment income were explored. A metropolitan economic zone framework comprising five multipoles and three special zones was applied for regional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absolute and relative income mobility focused on average income growth rates and changes in income quintiles, income changes were examined. Considering the overcrowding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research also compare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non-capital reg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income change patterns varied depending on migration status, direc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distinct trends observed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Furthermore, the study extended the analysis period to 2017~2023 to investigate long-term income mobility and tracked the income changes of young migrants based on the timing of their migration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youth population was also explored by disaggregating the dataset into those in their 20s and those in their 30s.

In summary, using longitudinal data, this research empirically confirm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migration and income mobility among the youth population, and the various patterns by gender, region and age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e potential for utilizing Income Mobility Statistics when making policies and possibilities for further analysis through the linkage with various administrative data in the future.

Key words: GSIM, income mobility, longitudinal census, administrative data,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5 multi-poles & 3 special zones

연구진

- 권신정(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 이석민(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6-05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인 쇄	2026년 9월
발 행	2026년 9월
발 행 인	백지선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mods.go.kr/dsri/
ISSN(Online)	2733-4120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